

북한개발소식

2026 JAN

01

통권 243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1화)

북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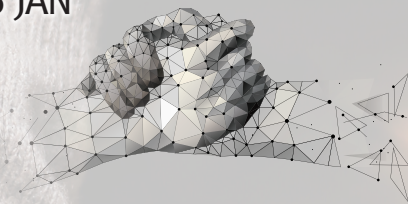
北 “종교 활동 사실상 근절 단계”...
통제 성과 자신감 드러내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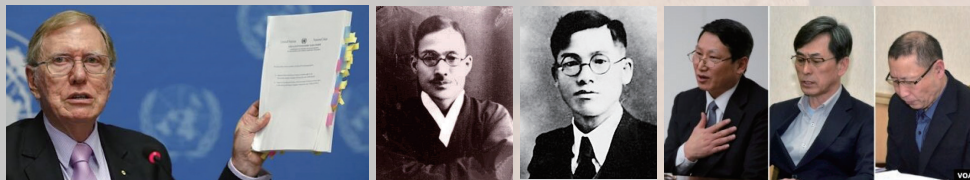
CONTENTS 2026 JAN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 권두칼럼 **01**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 칼럼_1 **09** 이상용_ 외부 세계 지우고 '영생' 주입 : 김정은 체제의 新통치 방식
- 칼럼_2 **15** 임창호_ 북한 인권, 침묵하지 않는 신앙의 계보
- 칼럼_3 **19** 정베드로_ 2026년도 북한 인권 개선 과제 - 침묵을 넘어 책임으로
- 탈북민 수기 **25**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 (제 1화)
- 북한뉴스 **31** 北 "종교 활동 사실상 근절 단계"... 통제 성과 자신감 드러내 외
- 서평 **37** 남북 경험 80년 - 절망과 기교의 역사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4년 러우 전쟁 파병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북한은, 2025년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강화된 자신의 입지를 여러 차례 과시하며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의 맨 앞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베트남, 미얀마 등 제 3세계 주요 수반들이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 모인 모습 역시 과거와는 다른 북한의 강력한 입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한의 화려한 부상 뒤에는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극심한 억압과 박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자칫 화려한 대외 행보에 밀려 소홀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특별히 기독교 박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드리고자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¹⁾ 발간(2014.2.17.)이 벌써 10년을 넘겼다. 작년에는 보고서 10주년을 맞

1) 유엔 차원에서 발표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는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의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고, 이러한 잔혹한 행위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 여러 북한 연구 기관 및 인권 단체들의 자체적인 북한 인권 상황 평가 노력이 있었다면, 올해는 정식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24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 현행화(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북한인권 포괄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인권이사회 제60차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업데이트 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가 2025년 9월 4일 발표된 것이다.



〈2014년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보고서는 각각 ① 시민 공간(civic space) 및 기본적 자유, ② 사법 및 법치, ③ 발전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④ 평등 및 비차별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인권 상황을 평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를 대부분 수용 및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COI 조사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납치된 외국인을 비롯한 실종자 수십만 명의 생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7년간 가족 이산 상봉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헤어진 가족 간 소통이나 송금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국민은 국가의 끊임없는 선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종교의 자유는 특히 “미신 행위”를 중심으로 여전히 극심하게 제한된다.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는 성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차별이 만연하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 성 및 젠더 기반 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가 산재함에도 해당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젠더 평등을 달성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감추고 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한 기아 심화로 인해 식량권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이 겪은 일상이기도 했다.”²⁾

해당 보고서는 일부 사안의 경우,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실제로 집행되는 점, ② 심각하게 퇴행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그리고 이와 연관된 외국 매체 공유 등의 행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적용하는 점, ③ 기술의 발전으로 강화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감시, ④ 각종 돌격대 운용 등 증가한 강제노동, ⑤ 국경 통제 강화와 국내 이동을 대상으로 한 허가 제도 확대로 자유로운 출입국 및 국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의 억압 심화, ⑥ 국가의 경제 통제 기조에 따라 타격받은 국민의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언급했다.

특별히 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한 점은 심화하는 정부의 국민 통제이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소위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국민의 삶 면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이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단속을 강화했다. 아주 사소한 불만 또는 불평도 없애려는 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발언을 언급하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단편적이거나 개선의 모습이 관찰된 사항은 있었다. 몇 개의 법령이 공정한 재판 보장 조치를 강화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두 개의 인권 조약을 추가로 비준했고, 일부 조약 기구에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으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하는 등 국제 인권 제도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움직임은 여전히 주민들의 삶과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이다.

해외 북한 인권 악화 상황

해외의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인권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0만 명 이상, 러시아에도 1만 5천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며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차 늘어나는 북한과 인접국 간의 교류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데일리NK AND 센터는 25년 7월 ‘중국 수산공장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

2)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A/HRC/60/58 (2025.09.04.), pp.12-13.

보고서'를 발표했다.³⁾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 전부터 간부에 게 거액의 뇌물을 바쳐야 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생활평정서 발급을 대가로 성적인 수모까지 견뎌야 했다.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 도착한 이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도착 즉시 여권을 관리자에게 압수당하며, 공장 내 숙소에서 24시간 교대 감시를 받고, 외출이 엄격히 통제돼 외부와의 접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중국 수산공장이 지급하는 임금은 노동자 개인 계좌가 아닌 북한 당국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송금되고, 이후 임금 분배는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수산공장과 계약된 임금의 10~20% 수준만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하며, 나머지는 모두 북한 당국에 의해 회수된다.

원양어선에 붙잡혀가 노예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소식도 들린다. 영국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은 중국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일한 필리핀·인도네시아 선원 19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년간 가족과의 연락도 끊긴 채 바다에서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는 북한 선원들의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배가 정기 입항하는 때에도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육지를 밟지 못하고 배를 옮겨 다닌다. 인터뷰 중에는 8년간 땅을 밟지 못한 북한 선원과 일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한 북한 선원들의 봉급은 바로 북한 정부로 송금되었다.⁴⁾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5년 9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⁵⁾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법 제도, 대학, 중개업체, 북한 대사관 등이 서로 얽혀 부패와 인권 관계 속에서 북한 노동자 착취가 제도화되어 있다. 일례로 현재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학생 비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2020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무허가 취업을 합법화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를 이용해 러시아의 일부 대학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등록금만 받고 형식적 입학을 허용해주었다. 이러한 학비와 중계 수수료, 충성 자금 등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되며, 그나마 남은 급여도 북한 정부로 송금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하루 12~17

시간씩 혹독하게 일하면서도 임금의 대부분을 상납당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가족은 북한 내에 인질로 남아 있어 탈출은 불가능하고, 여권과 신분증은 압수당한 채 이동과 생활조차 통제받는다. 보고서는 이들의 처우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강제노동의 모든 지표를 충족하고 일부는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 부대가 직접 노동단을 파견하며 해외 노동 수익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단순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 뿐 아니라 탈북자 강제 복송 문제도 심각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에만 강제 복송된 탈북자가 4백 명 이상이며, 2020년 이후로 계산하면 1천 명 이상이 복송되었다고 보고했다.⁶⁾ 꼭 복송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체류 탈북 여성들은 심각한 디지털 감시 속에서 억압받고 있다. 25년 11월 발표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보고서⁷⁾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체류 탈북자들의 얼굴·지문·DNA 등 포괄적 생체정보를 수집하고,公安의 정례 확인, 앱 기반 비대면 감시, 가정 내 CCTV 설치 등 구조적 통제 장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신분증 등 탈북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장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신원 보증 장치도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탈북민들은 이동·취업·의료 이용 등 기본 생활 전반에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일상화된 감시로 인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도를 넘어선 북한의 주민 통제와 기독교 박해

앞서 유엔 보고서에서 주목한 북한의 주민통제는 기독교 박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최근 제정된 주민 통제 법령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는 '미신전파죄'라는 명목으로 종교 미디어를 접한 이들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을, 유입·유포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규정한다. 청년교양보장법은 제41조에서 '청



〈중국 수산물 공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Outlaw Ocean Project)〉

3) 이상용 외, 「중국산 수산물 포장에 담긴 착취, 통제, 그리고 책임」, 서울:데일리NK (2025.07.18.)

4) “북한 노동자들, 중국 원양어선서 ‘노예’ 수준 착취”, 경향신문 (2025.02.2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41724001>>

5) 김유니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과 착취」, 서울:북한인권정보센터 (2025.09.22.)

6) “중국: 북한인 강제송환 멈추지 않아”,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2025.10.15.), <<https://www.hrw.org/ko/news/2025/10/15/china-no-letup-in-forced-returns-to-north-korea>>

7) 신동희 외,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서울:북한인권정보센터 (2025.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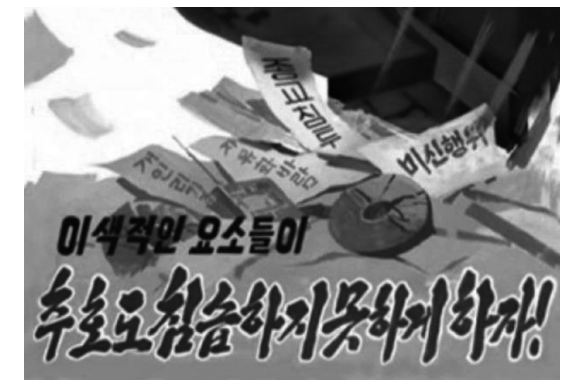
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 중 하나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종교와 미신행위'를 거론한다.

이렇듯 최근 법령을 통해 북한의 제도화 된 종교 박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를 넘어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인 통제와 단속, 그리고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25년 11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청년교양법 상에 종교행위 금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을 계기로 국가보위성 반탐(반간첩) 부서를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내 종교 활동을 크게 억제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⁸⁾ 종교 단속만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는 없지만, 반탐부가 종교 행위를 '반국가 범죄'로 분류해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정보 유입이 잦은 국경 지역(함경북도·양강도 중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유학생이나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중·삼중 감시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지하 예배 조직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일부 주민이 혼자 기도하거나 성호를 긋는 정도의 개인적 행위만 남아있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자체 평가라는 것이다.

선교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5년도 초에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서 북한의 사회안전성이 주도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사회통제와 검문과 검색, 가택수색과 체포가 거의 반년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길목, 젊은이들을 집중해서 단속하였고, 처벌도 강화하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및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이 사회통제와 단속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류 문화와 함께 기독교의 유입 및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살하려는 집중적인 단속이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숨겨놓은 기독교 관련 문서들이 적발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에 기독교 관련 디지털 자료들이 있는 경우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는 실제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전후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왔다. 통일

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함경북도에서 일어난 남한의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마을 주민 12명이 구속되고 그 중 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건,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되어 5명이 공개 처형되고 7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약 1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22년 황해남도에서 가택수색 중에 성경책이 발견되어 단속된 주민이 15년 형을 받았다는 증언 등 최근까지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하였다.⁹⁾ 강제 복송된 이들 중 신앙을 가진 성도에 대한 박해의 소식도 들려온다.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3년 복송된 이들 중 기독교 관련 단체와 접촉이 있었던 이들, 특히 성경을 들었거나 교리에 대해 들었던 기록이 있는 이들을 정치범수용소로 수감했다고 보도했다.¹⁰⁾



〈2020년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공개한 2018년경 황해북도 보위부가 반종교 교육을 위해 제작한 영상의 한 장면〉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독교 박해 사건 소식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장에서는 북한 당국의 집요한 추적으로 인해 지하교회가 적발되고 처벌받는 수 건의 안타까운 사건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 중에는 외부와 연계되어 있던 지하교회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 오랜 기간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온 한 신자 그룹이 비밀리에 간헐적으로 가져왔던 비밀 예배 모임을 당국이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하여 해당 신자 모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도 있었다. 확인된 사건들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신자들의 규모만 하더라도 백여 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정보 유통과 인적 왕래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들려오는 박해의 소식들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박해 사건이 북한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북한 인권 개선과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한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북한 인권

8) 北 “종교 활동 사실상 근절 단계”…통제 성과 자신감 드러내, 데일리NK (2025.11.13.), <<https://www.dailynk.com/20251113-1/>>

9)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pp. 280-281.

10) [강제복송 그 후②] 기독교 접한 사실 확인되면 관리소행, 데일리NK (2024.04.22.), <<https://dailynk.com/20240422-1/>>

이 바로 교회의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민 통제와 여러 억압적 정책의 주요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북한 당국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을 적발하여 처벌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신앙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제정한 주민 통제 법령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임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극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주민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기독교에 대한 강도 높은 핍박이 자행되어왔다.¹¹⁾ 게다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10년 넘게 억류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된 지 4천일이 되던 지난 2024년 9월 20일 한국·미국·캐나다 3국 정부가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가 아버지의 구명 활동을 위해 유엔을 방문하는 등¹²⁾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고(故)한총렬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다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장문석 집사가 풀려나 12년 만에 귀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문석 집사의 사례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북녘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기독교 박해는 일부 증언이나 특정 선교지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연구와 북한의 법 제도 분석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진 평양의 전경과 첨단 무기 체계, 외교 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드러내는 북한의 모습 뒤에는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희생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존재한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그들을 잊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박해받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이다. 🙏

11)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탈북민 응답자 13,707명 중 46%가 넘는 6,408명이 북한에서 종교 활동시 받게 되는 처벌로 정치범 수용소 수감이라고 응답했으며 모름(38.6%), 교화소 수감(10%)이 그 뒤를 이었다. 안현민 외, 「2020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 (2020.10.31.), pp. 151-152. 참조

12) [인터뷰: 북한 억류 선교사 아들 최진영 씨] “아버지 보고 싶어요...한국인도 미국인처럼 석방해 달라”, VOA (2024.04.02.), <<https://www.voakorea.com/a/7552422.html>>

칼럼 1

외부 세계 지우고 ‘영생’ 주입: 김정은 체제의 新통치 방식

이상용 (데일리엔케이 AND센터 디렉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보위성 방문(2025년 11월 중순)은 단순한 현장 시찰이 아니라, 북한의 통제 권력 구조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그는 축하문에서 국가보위성을 “당(黨)의 보위대이자 혁명의 전진을 지켜온 충성의 집단”,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라고 평가하며, 보위성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년 11월 18일 사회안전기관 창립 80돌 즈음에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공안·사법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간부들을 격려했다. (사진=조선중앙TV)〉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국가보위성이 외부 정보 유입을 사실상 차단해 왔다고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 제정)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보 통제 시스템을 정권 유지의 핵심 성과로 공식화하는 발언이자, 앞으로도 감시·단속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보위성의 기능을 “외부 세계 차단”과 “내부 질서 사전 통제”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이 기관이 향후 더욱 광범위한 공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위성 내부에는 충성 동원을, 주민들에게는 “감시는 계속된다”라는 경고를 동시에 보내는 정치적 연출로 해석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번 방문이 보위성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의 연결 시도는 무의미하며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목적이 컸다고 전했다. 즉, 외부 정보 차단 성과를 과시하는 행위 자체가 정권의 통제 구도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퍼포먼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보위성 방문은 단순한 치하가 아니라 북한식 통제 전략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강화된 정보 차단 체계를 ‘완성도 높은 성과’로 규정함으로써, 정권은 앞으로의 감시·검열이 더욱 체계화되고 지속될 것임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린 셈이다.

사상 생계·노동·이동권까지 위축된 주민 현실의 총체적 압박

특히 2021년 9월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은 ‘종교 차단’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법은 청년의 ‘혁명적 의식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 목적은 외부 종교·선교 네트워크와의 접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단속할 명분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법 채택 이후 보위·보안 기관은 종교 관련 문서, 성경 구절이 포함된 영상·오디오 파일, 중국 단둥(丹東) 등지에서 활동하는 선교 네트워크와의 접촉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다. 특히 청년층은 ‘외부 가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돼 단속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 보호가 아니라 종교·사상 통제의 법제화였으며, 종교 활동 색출은 현재 북한 통제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었다. 당국이 헌법에서도 명시한 ‘종교의 자유’는 명목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재차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북한은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전형적인 ‘정치행사 사전 정비’ 국면에 들어서기도 했다. 2025년 중순부터 평성(평안남도)·남포특별시·청진(함경북도) 등지에서는 공개재판이 반복적으로 열리고, 시장 질서 위반이나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공개 처벌 사례가 늘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 처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개재판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확실한 공포 분위기를 주입하는 효과를 가진다. 북한이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주민 행동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경제·생계 활동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해졌다. 장마당 환전 단속, 가격 통제, 상

인 이동 검열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농촌·건설·철도 등 각 부문에서 동원을 강화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제 강화는 곧바로 주민들의 인권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검색과 문자 기록 검열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으며, 경제 단속은 생계형 활동을 범죄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성들은 장사 활동의 불안정성에 더 취약해졌고, 청년층은 사상교육과 규율 통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노동 동원과 영양 불안도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도 심각하다. 중국 수산물 가공공장과 러시아 건설·노동 현장에서의 장시간 노동, 임금 착취, 사고 발생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IT 노동자 파견 역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강제노동 구조로 평가된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북한은 해외 인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부의 정보 통제 정책과 동일한 구조적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 모든 흐름은 북한인권 상황이 단기적·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정권 유지 전략 전체 중 일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은 법률·단속·보안 체계가 서로 맞물린 구조적 억압이며, 정보와 종교, 표현과 이동, 경제적 생계권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동시에 침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북한 통제 양상 요약

통제 영역	구체적 통제 방식
종교·사상 통제	청년교양보장법의 종교 차단 조항, 종교 자료 색출(문서·오디오·영상), 단둥 등 선교 네트워크 접촉 추적 강화
정치행사 대비 공포통치	평성·남포·청진 등에서 공개재판 확대, 비사회주의 단속 강화, 주요 정치행사 전 본보기 처벌 강화
경제·생계 통제	장마당 환전 단속, 가격·물가 통제, 상인 이동 제한, 농촌·철도·건설 등 부문별 동원 확대
디지털 감시	휴대전화 검사, 문자·통신 로그 분석, 단말기 인증 및 사용 기록 추적 등 스마트폰 기반 감시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 통제	중국·러시아 현장 장시간 노동, 임금 착취·사고 은폐, IT 노동자에 대한 원격 감시·성과 압박, 가족 통한 간접 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전사자들의 ‘추모의 벽’〉

‘영생’까지 동원된 충성 교육: 자폭 영웅담의 정치적 기능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의 자폭 사례를 ‘영웅적 위훈’으로 선전하며 “목숨을 바치면 영생을 누린다”는 표현을 군대와 청년층에 반복 주입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상 학습이 아니라, 외부 정보 차단 정책과 맞물려 ‘체계적 희생 강요’의 이데올로기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이다. 자폭 전사자의 미화는 최고사령관(김 위원장)에 절대 충성을 바치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는 식의 메시지로 변환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내부 불만을 억누르고 통제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혁명의 전진을 지켜온 충성의 집단”이자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라고 국가보위성을 치켜세운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미 드러난다. 다시 말해 정보의 흐름을 틀어막은 뒤 내부 선전·선동으로만 세계를 구성하려는 전략이 본격화한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부 정보 차단과 ‘영생론’ 선전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외부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과 군대를 대상으로 북한은 죽음의 가치를 미화하며 충성과 희생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폭 전사자를 “조국과 영도자를 위해 영생을 택한 영웅”으로 포장하는 서술은 종교적 언어 체계를 차용한 전형적인 통치 기법이다.

이는 청년교양보장법을 통해 ‘종교 차단’을 법제화해 놓고도, 정작 내부 선전에서는 종교적·초월적 개념을 동원해 주민의 정신을 장악하는 사이비 종교적 통치 방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군 내부에서도 ‘죽으면 영생한다’는 구호는 오랜 세월 사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그 강조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증언이 나온다. 다만 군 간부들조차 자폭 사례 선전이 실전에서의 참전 의지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보

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희생 서사가 실질적 군사 동원력 확보보다는 체제 결속과 불만 차단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더 가까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죽음을 충성의 증표로 내세우는 선전 방식은 군의 심리적 소모를 심화시키는 위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평양 청천거리에 위치한 영생탑〉

결국 북한은 외부 세계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영생’이라는 종교적 언어와 ‘자폭 영웅담’을 결합해 극단적 충성과 희생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제, 사상 주입, 종교적 상징 조작이 결합한 북한식 정치 통제 모델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북한 당국은 지금 주민들의 삶뿐 아니라 정신의 영역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적 선전 구조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사회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는 기록에서 시작된다: 북한인권의 미래를 위한 과제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부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이다. 정보는 삶의 조건을 바꾸는 최소 단위의 자원이며,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라디오·SD카드·위성 기반 정보 접근 확대, 해외 노동자 대상 정보 유입 경로 다변화 등 기술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세계 인식을 확장시키는 출발점이다. 정보 접근성 보장은 단순한 인식 개선이 아니라, 주민 개인의 선택권을 되찾아 주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도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장시간 노동, 임금 착취, 사고 은폐가 반복되면서 파견 노동자는 사실상 ‘외부 감옥’에 갇힌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기업·지역 정부·중개 네트워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국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U·미국의 공급망 실사 제도와 연계한 국제적 감시 플랫폼 구축은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북한 인권, 침묵하지 않는 신앙의 계보

임 창 호 목사 (장대현중고등학교 교장, 2025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조직위원장)



<평양의 한 신축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교실뿐 아니라 컴퓨터실과 음악실, 실험실 등에도 CCTV가 확인된다 (사진=조선중앙TV, 2024년 11월 21일)>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 체계 역시 국제적 규율 틀이 필요한 핵심 분야다. 스마트폰 기록 검열, 통신 로그 분석, 단말기 인증 시스템은 정보 통제에서 ‘기술 통제’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감시 문제가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사생활·표현·사상의 자유를 동시에 침식하는 구조적 억압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술 감시 문제를 인권 규범 안에 편입시키고, 북한의 디지털 통제 실태를 지속적으로 기록·보고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표현·사상의 자유 문제는 북한 인권 구조의 가장 깊은 뿌리를 이루는 영역이다. 최근 청년교양보장법을 통한 종교 차단 법제화, 자폭 전사자 미화에 영생을 결합한 선전 방식 등은 북한이 주민의 정신세계를 종교적·초월적 언어로 통제하려는 방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적 통치는 단순한 사상 문제를 넘어, 주민의 정신적 자율성을 철저히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요구된다.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주변적·보조적 차원의 의제가 아니다.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한 사회의 불만은 오히려 더 깊은 층위에서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는 단숨에 오지 않지만, 억압과 침묵을 기록하고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드러내는 작업은 언제나 변화의 첫 번째 계단이 되어 왔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일, 그 자체가 북한 주민을 향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연대의 시작이다. ☹

1. 북한 인권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고 외치며 행동하는 일은 오늘 갑자기 등장한 시대적 유행이나 정치적 의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걸어온 길, 다시 말해 침묵하지 않는 신앙의 계보 위에 놓여 있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살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편안한 타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렇게 걸어왔고,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 성장과 부흥을 맛보았다.

오늘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과거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 의식”이라던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공산주의는 정치 문제이지 신앙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요하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역사적 증언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었다.

2. 신사참배에 맞선 신앙의 저항

1) 신사참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1930년대 일제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식” “비종교적 행사”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분명한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종교 강요였다. 신사 앞에서 절하는 순간,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 갇히고 국가는 절대화 되었다. 많은 교회 지도자가 생존을 이유로 타협했지만, 끝까지 저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무모해 보였고, 교회 성장과 민족 생존이라는 명분 앞에서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비난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신앙은 훗날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증언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교회 앞에 한국교회 신앙의 사표가 되었다.

2) 주기철 목사와 순교적 신앙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여섯 차례 투옥되었고, 끝내 옥중에서 순교했다. 그는 단지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언했다. 그의 설교와 글에는 한결같이 이런 고백이 절절히 흐른다. “나는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주기철 목사의 저항은 정치 투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의 주권을 지키는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을 절대화하는 체제에 대한 신앙적 거부였다. 오늘 북한 체제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절대화하는 구조와 이 신사참배 강요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3) 손양원 목사와 사랑의 저항

손양원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옥되었고, 해방 후에도 여수·순천 사건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두 아들을 잃었다. 일제의 우상숭배 강요와 공산주의 체제 협조 요청을 거부한 목사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아들을 죽인 이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음으로써, 폭력의 논리를 신앙으로 끊어내는 저항을 보여준 진정한 작은 예수였다. 손양원의 신앙은 순응도 폭력도 아닌, 복음적 저항이었다. 이는 오늘 북한 인권을 말하는 교회가 결코 증오나 보복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존엄과 회복의 언어로 말해야 함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다.

3. 공산정권에 맞선 또 하나의 신앙 고백

1) 북한에서 신앙은 ‘범죄’가 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에 들어선 김일성 공산정권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

했고, 기독교를 체제 경쟁자로 간주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교회가 많았지만, 공산화 이후 교회는 폐쇄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 이때 많은 교회 지도자와 기독교인들은 선택을 강요 받았다. 공산 체제에 순응하며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인가.

2) 순교와 탈출,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 증언

김일성은 1970년대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북한에서 모두 제거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체포되어 순교한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남하 과정에서 신앙 때문에 처형당한 이들, 혹은 생명을 걸고 38선을 넘어 내려온 이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향한 증인들이었다. 이들의 증언은 분명했다. 공산주의는 단지 다른 정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구원을 약속하며 인간을 절대화하는 체제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고, 침묵하지 않았다. 이들이 새롭게 시작한 남한에서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한국교회 부흥, 한국경제의 기적적인 성장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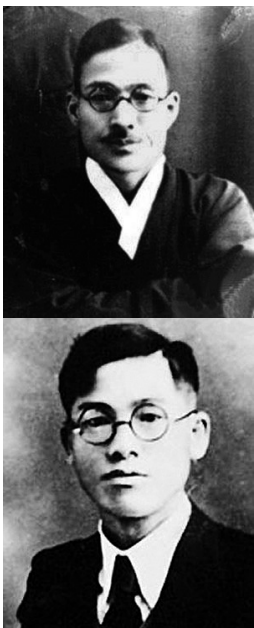
4. 이 신앙의 계보는 오늘 어디로 이어지는가

1) 북한 인권을 외치는 것이 곧 북한 선교다

오늘 북한은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김 씨 부자 3대 세습이 이어지는 80여 년간 전혀 달라진 적이 없다. 성경 한 권이 정치범수용소로 가는 증거가 되고, 기도는 반역이 되며, 인간의 존엄은 체제 유지를 위해 철저히 짓밟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갈 길을 여는 선교적 행위다. 북한 인권을 외치는 순간, 교회는 이미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란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있음을 증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0.8%의 교회, 끊어진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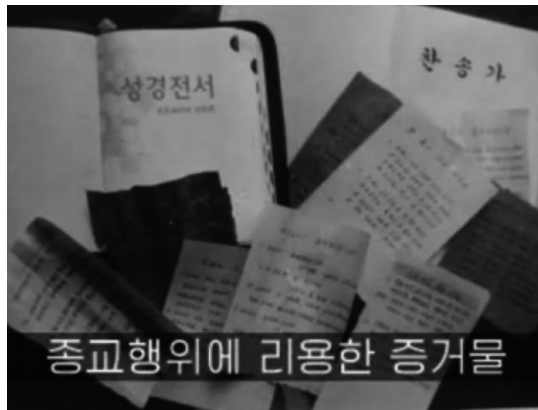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교회 안에 북한 선교부를 설치한 교회가 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 위대한 신앙의 계보가 심각하게 퇴보



〈주기철 목사(상)와 손양원 목사(하)〉

2026년도 북한 인권 개선 과제 — 침묵을 넘어 책임으로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



〈북한이 제작·배포한 주민 교양용 동영상의 한 장면. 종교 행위를 한 주민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변부로 밀어낸 결과다.

5. 다시 침묵하지 않는 교회로

한국교회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공산독재에 맞섰던 양심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북한 인권을 외치는 일은 위험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도, 공산정권에 저항했던 것도 모두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택했다.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한다.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갈 차례다. 북한 인권을 외치는 교회만이 성경적인 교회이며, 북한 동족을 향해 입을 여는 교회만이 선교하는 교회다. 지금, 다시 한번 말해야 할 때다.

침묵은 신앙이 아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배신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외치는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곧 북한선교의 시작이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나는 법이며,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다. 한국교회는 중도를 걷겠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 위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북한 인권과 북한 동족 구원 문제에 침묵과 중립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그저 배신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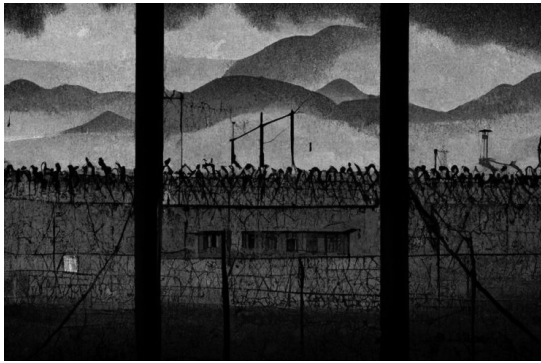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8). 🐟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지구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 곳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사상 통제와 성분과 차별 그리고 공포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땅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 회원국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상태로 존속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로 역대 최고의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이 잊지 않고 꼭 짚고 다뤄야 할 북한 인권 문제의 주제들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¹⁾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가장 심각하게 우려해 온 사안 중 하나이다. 유엔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북

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는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 조사 기구로, 북한 내에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COI는 2014년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가 “국가 정책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정치범수용소 일러스트 (일러스트=미드저니 midjourney, 데일리NK 재인용)〉

한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광범위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2025년 기준)까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제와 폐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분명히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오늘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는 강제 노동, 고문, 처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공개 처형이 공포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규율을 위반한 경우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며, 다른 수감자들은 이를 강제로 지켜보게 된다. 이러한 공개 처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수감자 전체에게 절대적 복종과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수용소 내에서 공포는 일상이며, 이는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종교 박해

2025년 발간된 북한 인권 기록 전문 기관의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탈북민 15,303명을 조사한 결과 99.6%가 “종교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억압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종교·신앙 실천이 극히 비밀리에만 이뤄지며 공식적으로는 종교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라고 보고되었다. 북한 정권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은 매우 다르다. 국제 인권 단체와 보고서는 북한이 종교 활동을 체제 전복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억압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령은 외부 사상·종교를 반체제적 문화로 규정함으로써, 성경 소지나 신앙 활동 자체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대다수 탈북민(약 99.6%)은 종교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응답은 체제적·구조적 종교 억압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 난민 강제 복송과 이동의 자유 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강제 복송된 탈북민이 고문, 강제 실종, 처형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약 6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 대한 이후의 생사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사건을 강제 실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 의한 추가적인 처벌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성 탈북민의 경우 강제복송 이후 성폭력, 강제 낙태,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법과 난민협약, 고문 방지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거주 이동 제한과 탈북민 강제 복송 문제는 단순한 국경 관리나 불법이주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하는 구조적 인권 문제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이며, 강제송환 중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범시민적, 범 국제사회의 실질적 조치가 요구된다.



〈23년 9월 8일,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지역목회자협의회 주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지 촉구 성명 발표에서 발언하는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사진=국민일보)〉

북한의 강제 실종 및 자의적 구금

북한에서는 강제 실종과 자의적 구금이 국가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권과 인간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강제 실종과 자의적 구금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조직적·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강제 실종은 국가기관이 개인을 체포·구금한 후 그 사실이나 행방을 은폐하여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체포된 인원의 행방 미공개, 정치범수용소 이송 후 생사 불명, 탈북 후 강제 송환된 인원의 실종, 종교 활동

또는 외부 접촉자에 대한 비밀 구금 등 이러한 사례들은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나 사법적 심사 없이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삭제’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북한의 구금 체계는 사법 절차에 기초하지 않으며, 국가안전부나 보위부의 결정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진다. 국제사회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강제 실종과 자의적 구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를 반인도 범죄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 억류 선교사·국군포로·납북자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옥(좌), 김국기(중), 최춘길(우) 선교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억류·구금 체계가 재판 없는 구금과 ‘실종’ 상태를 구조화하며, 타국 국민 납치·강제 실종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수행해 왔다고 판단했다. COI는 북한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강제 실종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대규모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제 실종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피

해자들이 장기간 감시·차별·이동 제한 속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COI는 북한에 대해 납북·강제 실종 피해자의 운명과 소재를 공개하고, 생존자와 그 후손의 즉각 귀환 및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권고했다. 유엔 총회 결의도 같은 취지에서 북한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유해 포함)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 기구는 강제 실종과 납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은 비엔나영사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대북정책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 즉각 공개를 촉구하고, 이들의 구금 사실, 위치, 건강 상태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비엔나영사협약에 따른 영사 접촉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 차별과 아동 학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여성과 아동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북

한에서 여성은 법적으로는 평등을 보장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은 저임금 노동과 강제노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구금 시설과 단속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적 착취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 시설에서의 강제 낙태,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성적 학대, 탈북 여성에 대한 폭력은 처벌 없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COI는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 아동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아동이 농촌 동원과 각종 노동에 강제로 참여하며,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아동 영양실조와 발육 장애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 지원 또한 제공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북한의 연좌제는 아동에게까지 적용되어, 부모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정치범수용소에 동반 수감되거나 사회적 차별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글을 나가며 :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

이와 같은 북한 인권의 현실은 단지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신앙의 과제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정치적·문학적 수사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종교 박해, 강제 실종, 탈북민 강제 복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생명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 성경은 억압받는 자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으며, 교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너는 말 못 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며,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변호하라”(잠언 31:8)는 말씀은 오늘 북한 인권 문제 앞에 선 교회에 주어진 분명한 명령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일회성 이슈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설교와 교육, 기도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박해받는 북한 동족을 향한 인권 감수성을 심어나갈 것이 요구된다. 특히 다음 세대가 북한 인권 상황을 역사적·윤리적 과제로 인식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필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1화

요가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이들, 강제 송환된 탈북민,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북한의 그루터기 교인들과 지하교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기도는 강요에 의한 단순한 습관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의 불의를 대신하여 고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책임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제 인권 규범에 기초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제기구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과 당국이 생사 확인, 송환, 영사 접촉권 보장을 촉구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특별히 10년 이상 북한에 강제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기억하며,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박정호와 같은 대한민국 국적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인권을 위해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실천’으로 인식해야 한다. 억눌린 자의 해방, 포로 된 자의 자유, 눈먼 자의 회복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늘 북한 땅에서도 절대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도와 행동은 곧 복음의 확장이며, 교회가 복음적 평화통일의 시대를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다.

2026년을 맞이하는 새해,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묻고 결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설 것인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기도와 행함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어둠을 거두시고 진리와 정의와 자유의 길을 여실 것을 믿는다.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미가 6:8) 

반세기도 다 지나버린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려 합니다.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때 그 시간.... 그곳에 있던 것이 저였는지 제가 아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진 지금에도 기억 속에 생생히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 걸 보니 그것은 제가 분명 경험한 일인 것이겠지요. 확실하지 않은 세상 속에 태어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제가 도대체 어떤 파도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노라면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그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는 고백뿐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를 여의시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고아원으로 보내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보내진 고아원에서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 아버지는 훗날 음악무용대학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대학 시절, 러시아 공연단이 북조선에 방문해 공연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몇몇 무용대학 대학생들이 러시아 여자들과 교섭하고 러시아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세 그 계획이 들통났고 탈북을 시도했던 학생들은 교화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라에서 보낸 곳이 제가 어릴 때 살던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음악가의 재능을 살려 탄광에서도 당 선전부에서 선전활동을 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였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그 두 분 사이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어릴 때 저는 몸이 많이 허약했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아기 때 얼마 못 가 죽게 될 것이라며 제 관을 미리 짜놓으셨다고 합니다. 늘 몸이 약하니 유치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가 일하시던 병원에 자주 있었습니다. 살던 동네가 탄광이라 병원에는 탄광 사고로 실려 온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탄광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에 얼굴이 다 타서 병원에 실려 온 아저씨들을 보고 기겁해서 뛰쳐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약한 저를 한 동의사(한의사)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동의사는 허가 없이 침을 놓는 의사였지만 실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의사 영감님은 저를 보더니 한 며칠간 침을 맞아야겠다고 하였고, 어머니는 저를 영감님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침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신기하게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사진=노동신문)〉

부모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지만, 집안 형편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도 한참 전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제가 소학교 3학년이 되던 즈음에 황해도 사시던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중국에 살고 계시던 이모할머니(외할머니의 언니)가 같이 살던 아버지(저의 외증조할아버지)를 모시고 북조선에 오셨기에 외할머니는 그들을 만나러 우리 집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중국이 북한보다 한참 못살던 시기여서 중국에서 친척이 오면 입쌀로 배급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할머니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우리 집에 떡을 만들러 방문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치매기가 오기 시작하신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치매가 오시면서 자꾸 조선에 가겠다고 하시니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이후로 약 1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봉양하셨습니다.

저의 외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할머니는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1년 전 와서 봤던 첫째 딸의 집안 형편이 너무 마음에 걸리셔서

손자인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겠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24살의 나이에 전쟁터에서 남편을 여의시고 과부가 되어 홀로 사셨지만, 사업도 하시고 도 녀맹위원장도 역임하시는 등 꽤나 단단하고도 넉넉한 삶을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가 녀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의 중앙위원장으로 큰 활약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녀맹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외할머니는 도 녀맹 위원장을 하고 계셨으니,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넉넉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할머니 댁으로 보내져서 생활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저희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호강을 누렸습니다. 생전 처음 바나나와 꿀을 먹어보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정이 많으신 분이었고 딸만 둘을 키우셨다 보니 손주인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두 살 터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오누이 사이였습니다. 동생은 항상 나를 가만두지 않고 옆에 와서 재잘재잘하거나 꼬투리를 잡아 놀리거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기도 어찌나 많이 싸웠는지.... 게다가 항상 싸우고 나면 동생이 어머니에게 일러바쳐서 우리 둘 다 혼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이 오면 온 나라가 축제입니다. 그날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그 간식이 그때는 어찌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 귀중해서 최대한 아껴먹기 위해 숨겨놓고 조금씩 꺼내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기 간식은 금세 다 먹어 치워버리고는 제가 감춰놓은 것까지 뒤져서 먹어 치웁곤 했습니다. 간식이 생각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 먹으려다가 간식을 둔 곳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허탈감에 동생과 싸운 것이 몇 번입니다. 할머니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며 “우리 집에 인쥐가 있어서 인쥐가 다 먹어 버렸네.” 하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여동생과의 행복했던 시절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혈기 왕성하던 십 대 시절, 친구들과 소동을 일으킨 것 때문에 할머니와 떨어져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고학년이던 저는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맞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를 이렇게 만든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복수를 해주어야 한다면 저를 포함한 7명의 남학생이 씩씩 대며 길을 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전국의 노동자 및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예술 및 체육 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2022년 태양절 기념 인민예술축전 모습. (사진=노동신문)〉

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상대편 학교 학생들을 길에서 맞닥뜨렸습니다.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 튀기는 패싸움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혈기 왕성한 사춘기 남학생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단체로 싸우고 있으니, 안전원(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다들 잡히지 않으려고 부리나케 도망을 갔지만, 싸움 도중 머리가 다친 친구가 생겨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지키고 있던 안전원

에게 딱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패싸움을 한 것도 문제였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양쪽이 맞닥트린 장소가 하필이면 딱 김일성 동상 앞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스러운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 난리를 피운 것은 안전원 입장에서는 눈을 감아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불들려서 이틀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닌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십 년을 넘게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할머니께 너무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너무 안타까워하셨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부모님께서 탄광 마을에서 떠나 큰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신 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호른이라는 관악기를 도에서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었기에 그 재주를 활용하여 탄광 마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4.15만 되면 열리는 노동자 축전에서 늘 공연을 하셨습니다. 김일성 장군을 모시고 하는 큰 축제였기에 아버지는 해마다 2~3개월씩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평양 주체사상 탑을 건설할 때 선전대로 뽑혀 김일성 장군과 사진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니 우리 집도 숨통이 트여 좀 먹고살 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막내인 남동생도 출산하시고 저까지 다시 어머니 밑으로 가게 되어 식구가 많아졌지만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삶은 웬일인지 순탄치 않고 꼬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이사 온 후 학교에서는 군대에 갈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그때는 군

대에 가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군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뽑히는 아이들은 키가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때 당시 다른 애들에 비해 키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동원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하던 중 관리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정직, 너는 어째 문건이 비어 있다?” 고향에 있어야 할 저의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저의 군사동원부가 지금 할머니 댁이 있는 황해도로 넘어가 있어 이곳 함경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패싸움으로 어머니 집에 돌려 보내지기 몇 달 전, 저를 군대에 보내시려고 잘 아는 동원부 지인에게 이야기해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고향에 있던 저의 서류 문건을 황해도로 가져갔었던 것입니다. 6개월만 있으면 문제없이 군대에 갈 수 있었던 것을 김일성 동상 앞에서 패싸움을 하면서 모든 것이 꼬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군대나 대학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후 제철소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파란만장했던 십 대 시절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형형색색 빛나던 것이었는지.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 빛을 잃어가면서 그제야 삶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삶은 어느덧 무채색이 되어갔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삶이 가장 높으신 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저를 위해 기도하신 외할머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께서는 매번 밥을 지으실 때마다 혼자 중얼중얼하셨습니다. 이제 막 50대 나이인데 왜 저렇게 치매 걸린 사람처럼 중얼중얼하시는지.... 평소 할머니는 너무 정정하시고 명석하신 분이셨기에 할머니의 이상한 습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서 농작을 뒤지다가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나무 막대기 두 개가 포개진 장식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병원 장식 같은 모양이라 낯설었고 왜 할머니께서 이런 장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상하다는 생각만 잠깐 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놓아놓았습니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외할머니의



신앙의 흔적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걸음으로 보이는 외할머니의 삶의 이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 외할머니는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갔던 장면들이 사실은 저를 지탱해 주던 큰 힘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계속) 

北 “종교 활동 사실상 근절 단계”… 통제 성과 자신감 드러내

북한 당국이 최근 “조직적인 지하 예배나 비밀 기도회는 거의 사라졌다”고 평가하며 종교 통제의 성과를 자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민들의 종교 활동이 사실상 근절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체제 안정의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25년 11월 13일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이후 국가보위성 반탐(반간첩) 부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교양보장법 제 41조에는 청년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종교 행위가 명시됐는데, 법 제정 이후 4년 동안 보위성 반탐부가 관련 활동 및 유사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정보 유입이 잦은 국경 지역(함경북도·양강도 중심)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유학생이나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중·삼중 감시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귀국 후에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면 즉시 체포된다는 전언이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기독교와 천주교 관련 행위다. 여기에는 “무조건 관리소(정치범수용소)행”이라는 내부 방침이 작동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불교나 민간신앙에 따른 미신 행위도 역시 단

속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다고 전했다. 단속 방식은 정보원들의 제보와 첩보에 기반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증거 확보를 위한 공작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당국은 종교 사건을 공개하면 오히려 종교를 퍼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최근 들어 종교 사건을 주민 교양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다.

종교 행위로 단속·적발되면 본인뿐 아니라 3대가족까지 정치범수용소 내 완전통제구역에 격리된다. 소식통은 “보위성 내부에서는 ‘사상 교화’보다 ‘엄정 색출’이 우세한 분위기”라면서 “‘걸리면 무조건 관리소행이고, 교화는 없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이렇듯 강력한 처벌 속에 북한 내 종교 활동은 점차 위축돼 과거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던 지하 예배 조직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일부 주민이

혼자 기도하거나 성호를 긋는 정도의 개인적 행위만 남아 있다는 게 북한 당국의 평가라고 전하며, “(북한의) 종교 탄압은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체제 유지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내부에서는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종교 억압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참고: 데일리NK, 25년 11월 13일) 



북중 무역, 지난달 6년만에 최고치… 유엔 제재대상 품목도 거래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 규모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11월 북중 교역액이 2억 8천100만 달러(약 4천149억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9년 10월에 기록된 2억 8천700만 달러(약 4천238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기간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3천710만 달러(약 548억 원)로 9월 수출액인 4천300만 달러(약 635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이 기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규모가 2억 4천400만 달러(약 3천602억 원)로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액도 늘어났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수개월 간 의료기기와 농기계 등 각종 기계류를 북한에 수출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차량도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NK뉴스는 담보대출 미납으로 압류 대상인 중국의 중고차가 북한에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관총서가 발표하는 북중 교역 관련 자료에 밀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의 밀수업자들은 최근 수년간 압록강에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공식 통관절차를 회피하고, 트럭과 정밀기계 등 제재 대상 품목을 북한에 넘겼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25년 12월 19일)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 만장일치 채택…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가 2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참고: 연합뉴스, 25년 12월 19일) 

北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만에 종료… 대남·대미 메시지 없어

북한이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25년 12월 9일부터 11일 까지 진행하고 폐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관심을 끈 대미·대남관계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올해의 대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현 대외 환경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적 지정학 판도 변화 속에서 북한이 견지하는 핵능력 증강,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 국방력 강화 방향을 '올바른' 것이라며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국정을 "가속화된 전진 속도, 배가된 자생력", "역사적인 전환의 해"라고 총평하고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정치사업 대책'을 밝혔다. 특히 "당 제9차 대회 소집 전까지 미결된 중요대상들을 완공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해 국가 목표로 제시된 건설 대상을 마무리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도농 격차 감소를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내년에 건설 사업을 벌일 20개 시·군도 확정했다. 여기에 "탄광지구들까지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선을 또 하나 추가로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시정되어야 할 결점과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대회 승인에 제기할 당규약 개정안 작성' 문제가 언급됐다는 보도로 미뤄 당규약 개정이 확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이 당규약에 명문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통상 한해를 결산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12월 말에 5~6일간 진행하지만, 이번 전원회의는 12월 초중반에 사흘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열렸다. 김 위원장의 '결론' 등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개략적으로만 보도했다. 이번 전원회의가 9차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향후 정책노선 공개는 실질적으로 당대회에서 이뤄질 것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연합뉴스, 25년 12월 12일) 

김정은, 성탄절에 8700t급 핵잠 공개… “韓핵잠 건조는 공격적 행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월 25일 김 위원장이 8천 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딸 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

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며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25년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천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처음이다.

장기간 잠항 능력과 핵투발 능력을 갖춘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선전을 통해 한미에 '비핵화 불가'를 거듭 강조하고 자신들의 억제능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25일) 

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12월 5일(현지시간)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이번 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번 NSS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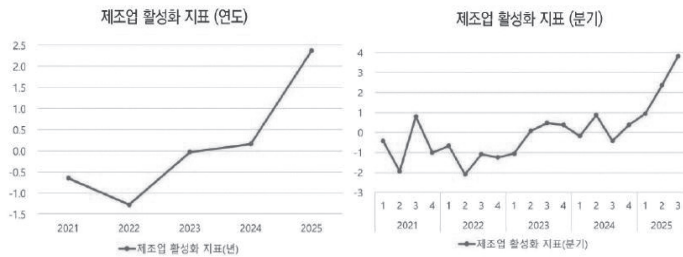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중국이 25년 11월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월 6일 보도했다.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백서는 대신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이번 군축 백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 성명과 정책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을 때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변화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는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25년 12월 7일) 

북한 야경 4년 만에 7배 밝아져… 북러 협력에 중화학공업 성장



〈위성 정보로 평가한 북한의 제조업 활성화 지표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자료)〉

장기간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한 야경이 급격히 밝아지고 제조업 생산도 더 활발해졌다는 위성정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12월 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북 제재 10년, 북한경제' 주제의 포럼에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올해 1~3분기 야간 조도 지표가 2021년의 약 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야간 조도 상승은 올해 두드러졌다"면서 "북한의 전력 생산과 효율 모두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명용 전력 소비 경향 자체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위성 이미지로 파악한 복사열, 온도, 조명도, 이산화질소, 표면활동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 지표도 2023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 올해 급등했다.

여러 위성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 제조업은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규철·남진욱 연구원도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중화학공업과 군수공업 밀집 지역의 생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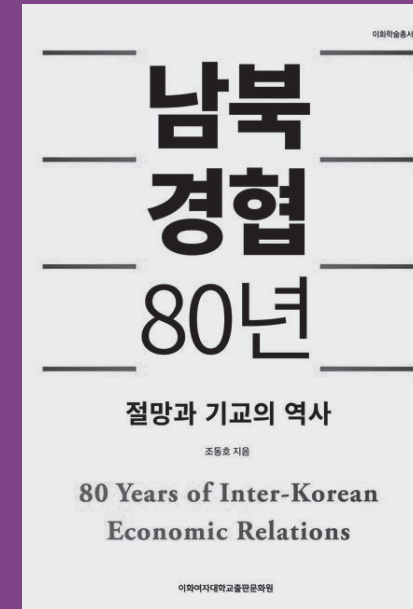
이 경공업 지역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했다며, 북러 군수협력이 북한 중화학공업의 급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 효과가 민간에까지 온기를 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자들은 지적했다.

김다울 연구원이 위성 정보로 북한 종합시장의 물류·매대 동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올해 종합시장의 활동은 작년보다 되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서는 물가 급등, 양곡유통·외환시장의 정부 통제 강화에 따른 주민소득 감소 등이 꼽혔다.

김규철·남진욱 연구원도 "북러 군수협력이 북한의 중화학공업의 생산력을 강화했지만 민수 경제로 파급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25년 12월 3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남북 경험 80년 -
절망과 기교의 역사

저 자: 조동호

출판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발행일: 25년 9월 30일

가 격: 45,000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지 어언 2여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에 국가별로 여러 정치적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전략을 고수 중이다. 오히려 미국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북간의 교류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인 분위기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남북 경험일 것이다. 실제로도 그간의 남북 경험은 확대와 위축, 재개와 종단을 오가곤 했다. 현재는 불안한 남북 관계 속에서 남북 경험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의 형성과 그에 편승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등을 생각할 때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남북 경험이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다.

오늘 소개할 책 “남북 경험 80년 - 절망과 기교의 역사”는 남북경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흔치 않은 책이다. 남북 경험의 시작과 진행 상황,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총정리한 저술은 찾기 힘든 것이 현

실인데, 이 책은 그러한 답답함을 해결하겠다는 듯 분야·시기·정부별로 남북 경험 진행 과정과 성과를 정리·분석·평가한 내용을 담은 남북 경험 종합서이다. 이 책의 저자 조동호 교수는 학계에서 또 정부에서 남북 경험의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함께하였던 만큼 남북 경험에 관련된 본인의 실제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700페이지에 가까운 풍성한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분량 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남북 경험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실제 남북경협이 진행되는 절차나 유형, 남북 경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남북경협의 역사, 그리고 교역 및 투자 부문에서의 실사례와 평가, 문제점 등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복잡한 남북 경험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책 말미에는 남북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다루면서 각 쟁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단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를 대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이 책은 단순히 남북경협과 관련된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 남북경협이라는 가능성의 공간에 헌신했던 경제인들과 정책구상자들의 의지와 꿈, 좌절과 안타까움을 종종 표현하는데, 실제 경험 현장을 함께했던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이 책의 부제 “절망과 기교의 역사”는 천재시인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절망은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 절망은 남북 경험의 근본적인 한계를, 기교는 이를 극복하는 일시적 방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주도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은 절망을 우회하는 전략, 절망이 해결한 듯 보이게 하는 기교를 통한 것이었지만 기교로 절망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기교로 절망을 우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북한을 다룰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이 부재하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만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의미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망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기교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많은 활자와 뽀뽀한 분량으로 쉽게 손에 들어오거나 술술 읽히는 종류의 책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종합서로서는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보인다. 남북경협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종합한 자료나 서적은 찾기 힘든 상황에서 “남북경협 80년”은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책이 될 것이다. 🐼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특히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인해 억압이 증대되고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도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교회를 적발, 추적하는 공안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을 비롯해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등이 여전히 억류 중입니다. 또한 강제 복송된 탈북 신자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으며, 지하교회 적발 및 실종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교회 성도 가족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지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핵보유국을 꿈꾸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반도가 북한이 말하는 대결의 장이 아닌 평화의 공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각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기도 제목

5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전에 비해 안정화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물가에 주민들의 생활은 힘겹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시장의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었고 서민들의 생계에는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방의 매서운 추위가 주민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찬 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 방막 등도 비용 문제로 구비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겨울나기 사정이 전해집니다. 심해지는 빈부격차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소외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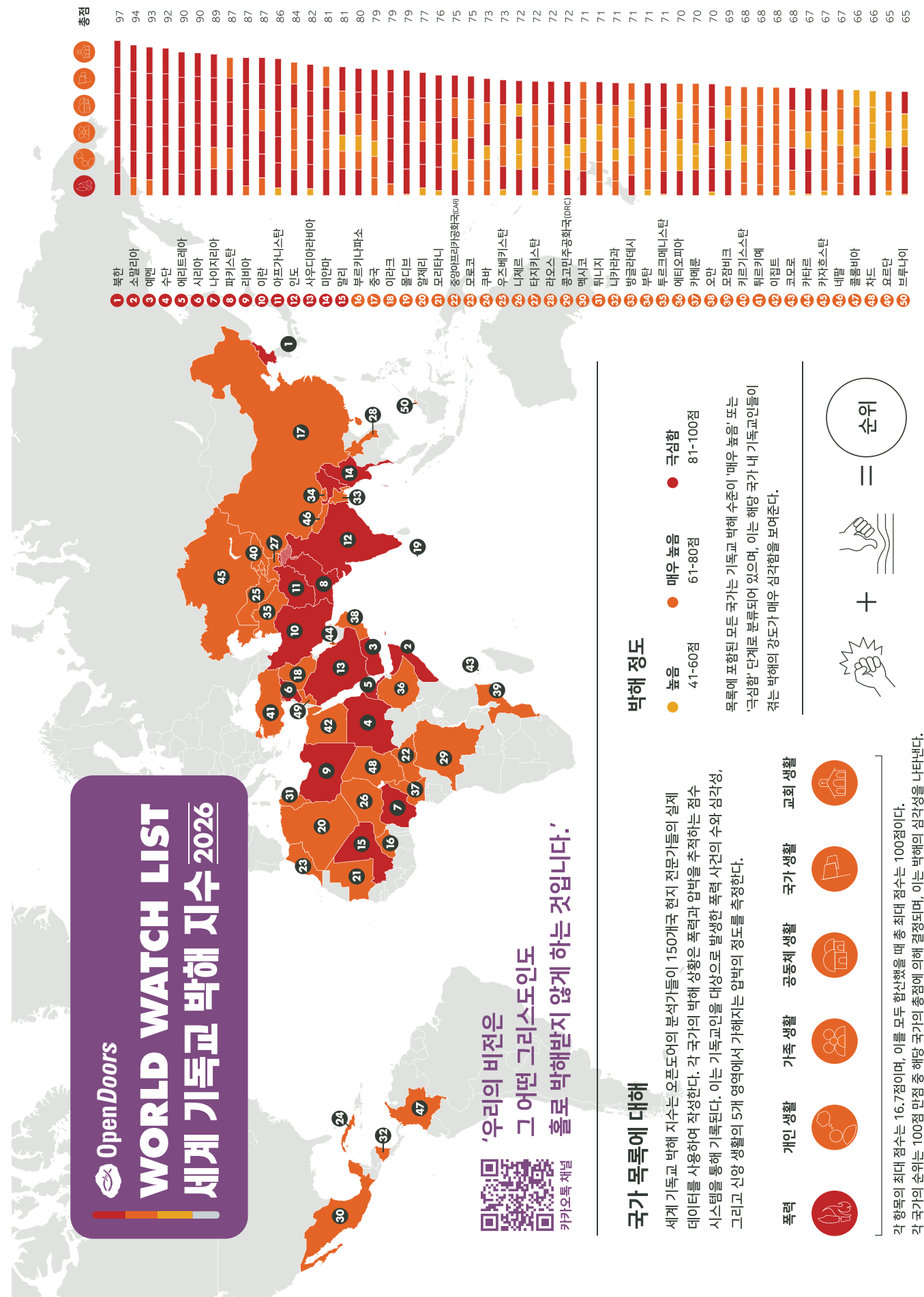
6 북한의 사이버 위협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은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을 비롯해 방산 기술 탈취, 각종 테러 활동,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 선교 사역자나 기관뿐 아니라 일반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직분자로 속여 신뢰를 쌓는 등 한국 교회의 문화를 잘 이해한 교묘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악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북한을 향한 선교적 관심과 참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악화하고 있는 제3국 북한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등록 가정교회에 대한 대규모 처벌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로 알려져 온라인 선교 사역에 비상 경고가 울린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2024년 초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12월 31일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를 돕기 위해
2026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및 시간 4월 6일 - 6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진행 형식 온라인(Zoom) 강의 /
오프라인 기도회 및 아웃리치 진행

일정(예정)

주차	날짜 (매주 월요일)	강의 주제
1	4월 6일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2	4월 13일	북한의 정치와 사상
3	4월 20일	북한의 사회와 문화
4	4월 28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5	5월 4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6	5월 11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7	5월 18일	북녘을 바라보는 기도회 (DMZ)
	5월 25일	휴강(대체공휴일)
8	6월 1일	NGO를 통한 선교와 국제협력
9	6월 8일	국내정착 탈북민선교와 통일목회
10	6월 15일	제 3국 북한선교 현장이야기
11	6월 22일	제 3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12	6월 29일	북한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성도
	7~8월	비전트립

접수 방법과 회비 등 자세한 사항은 곧 안내될 예정입니다.
함께 북한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나누고 키워가는 자리, 오픈
도어 북한선교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다니엘 간사 (info@opendoors.or.kr)

